與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경감' 공론화 나섰다

민주 원내대책회의…김태년 "이해 당사자·전문가 의견 수렴"
불가항력 상황 고통 분담…'착한 임대인 운동' 한계 입법조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의 공론화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하자 곧바로 입법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건물주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권장해 왔지만, '선의'에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여권 내 인식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외국에는 외부 원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깎아 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며 "우리도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미덕이 있어야 하며,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이동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감염병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와 상생 차원에서 제한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자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의원은 "지금 코로나 단계에 더 가속화하고 심각해진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열어놓고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대료 멈춤법은 집합제한 업종에는 임대료의 50%를 깎고, 집합금지 업종에는 아예 임대료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당 정책위원회는 구체적인 정책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대인의 임대료 감면 의무화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논의된 것이 없다"며 "착한 임대인 지원 방안 등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임대료 감면 의무화는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다"며 "내부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지 보고 있는데 아직 정리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윤석열 징계위' 관심 집중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장 후보 이번주 가려지나

후보 추천위 회의 소집 의결 절차…민주, 연내 청문회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수처 출범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만큼, 향후 절차도 '조속한 출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주중에 5번째 회의를 소집해 곧바로 후보자 의결 절차에 돌입한다. 추천위는 앞서 네 차례 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 2명의 반대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개정 공수처법은 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낮춰 5명만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추천위가 앞서 5표를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추천위가 의결을 마치면 대통령이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김진욱 연구관이 지명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는 김재형 대법관의 아내로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급적 연내에 청문회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차장 제청과 인사위원회 구성, 수사처검사 임명 등 출범 작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야당 측에서 절차마다 문제를 지적하면서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수사 및 조직 운영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가 적합하다며 김진욱·전현정 후보 추천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천위원을 사퇴하고, 그런데도 의결이 이뤄진다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전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수도권 3단계 시급"

당·정·광역단체장 K방역 화상회의

여권의 양강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민주당이 15일 진행한 당·정·광역단체장 화상점검회의에서다. 비대면 방식이긴 하지만 두 사람의 회동은 이 대표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매우 위중한 시기"라며 "지난 제1차, 2차 대확산에도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이겨냈다. 이번엔 상황이 더 위중해졌지만, 역시 연대와 협력의 시민정신으로 극복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3차 대유행으로 상당히 위험도가 높아졌는데, 민관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 간의 협조와 협력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비공개 회의에서 "지방과 수도권의 입장과 상황이 다르다"며 "수도권은 조속하게 3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재차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 지사의 주장에 즉답하지 않고 방역당국에 전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인공지능 안전사용 기본원칙 수립'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5일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수립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 삶의 편리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편향성, 불투명성,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유럽 등 인공지능기술 선도국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과학기술 활동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이 인류의 번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함께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에서 인간 제어 가능성, 오작동 대비, 위험 관련 정보의 공개·공유 방안 마련과 정부와 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사고에 대한 배상과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형석 "올 총선 후 발의한 법안 8건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15일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대표발의한 법안 8건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5·18 역사왜곡처벌법)의 본회의 통과는 지역으로서도 의미가 상당하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40년간 지속되고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폄훼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최초로 법에 명시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 1건, 개정안 7건 등 총 8건의 법안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의원은 경찰의 대국민 인권 보호 의무를 법에 명시한 '경찰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개정안'은 경찰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인권경찰 구현'을 관련 법에 규정한 것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경찰관의 대국민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강은미 '친환경車 보급 국가 책임' 법안 발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5일 "친환경 자동차 전면 보급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고 내연기관차 국내 판매 종식시점을 2030년으로 명시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친환경 자동차의 범위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규정했다. 또 '국가의 책무' 조항을 신설해 "국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하기 위해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자동차의 판매 종식 및 친환경 자동차의 전면 보급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2030년까지 달성하도록 이를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강은미 의원은 "한국도 과감한 국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대응지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한국이 기후모범국가로 변모하고 친환경자동차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